



[상세내용]

EU경제 동향 및 전망

김 홍 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팀장 (hckim@kiep.go.kr, Tel: 3460-1036)

김 균 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(ktkim@kiep.go.kr, Tel: 3460-1064)

1. 최근 EU의 경제동향
2. EU의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
3. 2008년 EU의 경제전망

주요 내용

▶ 2007년 EU 경제는 2006년과 거의 유사한 2.9%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4/4분기부터 경기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

- 2007년 EU 경제는 경기호조세를 이어가면서 2006년의 3.0% 성장과 거의 유사한 2.9%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 2007년 EU의 경제 성장은 2006년과 같이 가계 소비, 투자 및 수출증가에 의해 주도됨.

- 그러나 2007년 말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-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증가, 물가 및 금리상승, 신용경색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경기 부진, 주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문제와 복지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정책 추진 등이 EU의

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▶ EU의 2008년 경제성장률은 신용경색, 유로화 강세, 고유가 및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2007년보다 낮은 1.8~2.0%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- 물가상승과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, 신용경색과 고금리, 유로화 강세 등은 총투자 및 수출 증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.

- 금융시장 불안 및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국과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이 2007년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,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경기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1. 최근 EU의 경제동향

■ 2007년 EU 경제는 2006년에 이어 경기호조세를 이어감.

- 2007년 EU 경제는 2006년의 경제성장률 3.0%에 근접한 2.9% 성장을 기록함.
- 2007년 EU의 경제성장은 2006년과 같이 가계소비, 투자 및 수출증가에 의해 주도됨.

■ 그러나 2007년 4/4분기 EU 경제는 가계소비 감소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침체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됨.

- 2007년 3/4분기에 전기대비 0.8% 성장했던 EU 경제는 4/4분기에 0.5% 성장에 그침.
-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EU 경제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.

표 1. EU27 실질 GDP 증가율

(단위: %)

구 분	2005	2006	2007	2007			
				1/4	2/4	3/4	4/4
가계소비	1.7	2.2	2.2	0.3	0.6	0.6	0.1
정부소비	1.7	2.0	1.8	1.0	0.1	0.6	0.2
총 투 자	3.0	5.9	5.7	1.7	-0.1	1.4	0.7
수 출	5.5	8.7	5.2	1.0	0.6	2.0	0.6
수 입	5.9	8.7	5.0	1.3	0.2	2.9	-0.2
GDP	1.8	3.0	2.9	0.8	0.4	0.8	0.5

주: 분기 자료는 전기대비 증가율 기준임.
자료: 유럽통계청(Eurostat).

■ 2007년 가계소비 증가율은 2006년과 같은 2.2%를 보여,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구매력 확대가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.

- 2007년 가계소비의 분기별 증가율을 보면 1/4분기에 전기대비 0.3% 증가한 후 2/4분기와 3/4분기에는 동일한 0.6%를 기록하며 건실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4/4분기에 다시 0.1%로 급락함.
- 2007년 중 유럽중앙은행(ECB)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(3.5%→4.0%)과 8월 이후 신용경색 지속으로 금리가 상승하여 가계소비 지출에 부담이 되고 있음.

- 또한 원유 및 곡물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.

- 2008년 2월 EU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.4%를 기록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물가관리 기준치인 2.0%를 훨씬 넘어섰음. 이는 1년 전 수치인 2.1%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임.

- 다만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고용확대 현상이 소비지출에 기여하고 있음.

- EU27 실업률 추이: 7.4%(2007. 2) → 7.1%(2007. 8) → 6.7%(2008. 2)

■ 총투자 증가율은 2007년에는 5.7%를 기록하며 EU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분기별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4/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었음.

- 기업들은 그동안 수출호조와 임금인상 억제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상황이 호전되었고 주요국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정책으로 인해 사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를 확대해 왔음.

- 그러나 2007년 말부터 신용경색이 확산되면서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기준 강화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, 2007년 3/4분기에 전기대비 1.4% 증가했던 총투자가 4/4분기에는 0.7%로 하락하였음.

■ 2000~2007년 회원국들의 재정상황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재정 적자와 부채비율이 높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의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큰 폭의 정부지출 확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.

- 2007년 1/4분기에 전기대비 1.0% 증가했던 정부지출도 2/4분기에 0.1%, 3/4분기에 0.6%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4/4분기에는 0.2% 증가에 그쳤음.

■ 그동안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호조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해외부문이 EU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,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세계경기의 동반하락 현상으로 2007년 4/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.

- 2006년 8.8% 증가하였던 수출이 2007년에는 5.2% 증가로

떨어져 증가율이 둔화됨.

- 분기별 자료를 보면, 수출은 2007년 3/4분기에 전기대비 2.0%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4/4분기에는 0.6%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됨.

■ 한편 EU의 주요 회원국들도 2007년에도 2006년에 이어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나 역시 4/4분기 이후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- 2006년 2.9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독일은 2007년에도 2.5%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보였지만 4/4분기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 0.3%에 그쳐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.
- EU 회원국 중 비교적 저성장 기조를 보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07년 중 각각 1.9%와 1.5%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, 프랑스의 2007년 4/4분기 성장률도 전기대비 0.3% 증가에 그치고 있음.
- 그동안 높은 경기호조세를 보인 영국과 스페인은 2007년에도 각각 3.0%와 3.8% 성장하며 고성장 기조를 보였으나 2008년 들어 경기하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표 2. EU27 및 주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

(단위: %)

국 가	2005	2006	2007	2007			
				1/4	2/4	3/4	4/4
EU 27	1.9	3.0	2.9	0.8	0.4	0.8	0.5
독 일	0.8	2.9	2.5	0.5	0.3	0.7	0.3
프 랑 스	1.7	2.0	1.9	0.6	0.3	0.7	0.3
이탈리아	0.6	1.8	1.5	0.3	0.1	0.4	-
스 페 인	3.6	3.9	3.8	1.0	0.9	0.7	0.8
영 국	1.8	2.9	3.0	0.8	0.8	0.7	0.6

주: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임.
자료: Eurostat.

2. EU의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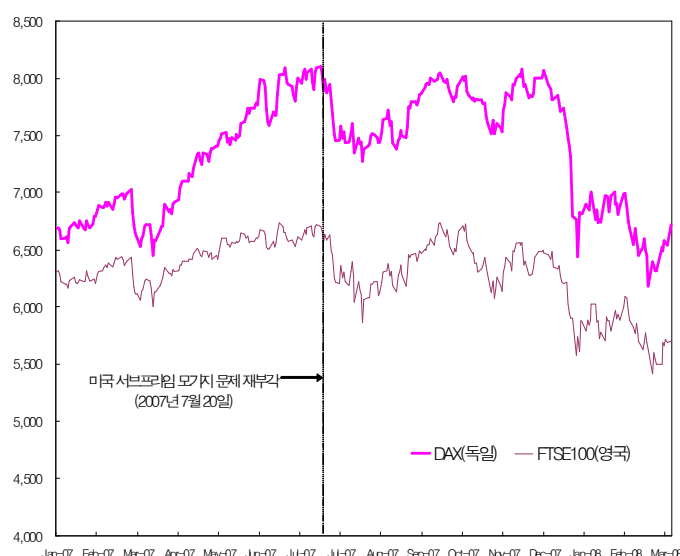
가. 서브프라임 사태(sub-prime crisis)

■ 2007년 8월 9일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12억 유로(22억 달러) 규모의 3개 자산유동화(ABS)펀드에 대한 환매중단을 선언

한 이후, 글로벌 신용경색이 유럽에도 급속히 확산됨.

-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다시 부각된 2007년 7월 20일 이후부터 유럽의 주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(아래 그림 1 참고).
- 유럽중앙은행(ECB)은 서브프라임 채권에 투자한 유럽계 금융기관들의 부실 확대에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유럽에서의 서브프라임 문제 확대 가능성 등을 주시하며 2007년 8월 9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총 2,8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 투입하였음.

그림 1. 유럽 주요국 주가지수 변화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■ 또한 영국에서는 신용경색의 여파로 고전하던 영국의 5대 모기지 은행인 노던록(Northern Rock)이 2008년 2월 결국 국유화되는 등 유동성 부족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.

- 영국에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따른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 노던록 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영란은행(Bank of England)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예금잔액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.
- 영국 정부는 노던록 은행의 민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민영화 노력이 무산됨에 따라 금년 2008년 2월 노던록 은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기로 결정함.
- 이렇듯 노던록이 유동성 부족으로 국유화 되는 등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모기지 은행들도 자금조달

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.

나. 유럽 주택경기 하락

■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들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금리상승, 신용경색 등으로 주택금융이 과거보다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체를 증가, 주택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
- EU 회원국 중 독일을 제외한 스페인, 프랑스, 영국, 덴마크 등 주요국의 최근 수년간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(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주택가격 상승률)이 연평균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음.
- 그러나 유럽중앙은행 및 영국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간 금리수준이 상승한 가운데 2007년 8월 이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급상승하고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경기가 부진한 상태임.

표 3. 주요 EU 회원국들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

(단위: 전년대비 %)

국 가	1981~1990	1991~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*
스페인	6.6	1.3	6.5	12.8	16.3	14.9	10.9	6.3	3.8
프랑스	0.7	0.1	6.0	6.2	9.3	12.5	13.2	10.1	6.8
영 국	6.8	1.1	6.9	14.6	14.5	10.3	3.5	3.8	8.3
덴마크	-0.3	3.1	3.5	1.3	1.1	7.9	15.6	19.2	3.4
독 일	-1.6	0.1	-1.9	-3.3	-2.0	-3.8	-2.0	-1.1	-0.6

주: * 2007년은 상반기만 해당됨.

자료: Eurostat.

■ 주택가격의 급등은 그동안 부(wealth)의 효과를 일으켜 가계 소비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모기지 대출에 의존하여 주택을 구매한 가계들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채무부담이 높아져 향후 가계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

- 특히 모기지 대출이 변동금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경우, 가계의 채무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.¹⁾

1) 미국은 모기지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92%에 달하지만, 영국은 사실상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임. 즉 영국의 경우,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62% 정도(2007년 상반기 기준)이나 이 중 95%가 처음 2년간 고정금리 지급 후 잔여기간 동안 변동금리로 변환되는 구조임.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커지게 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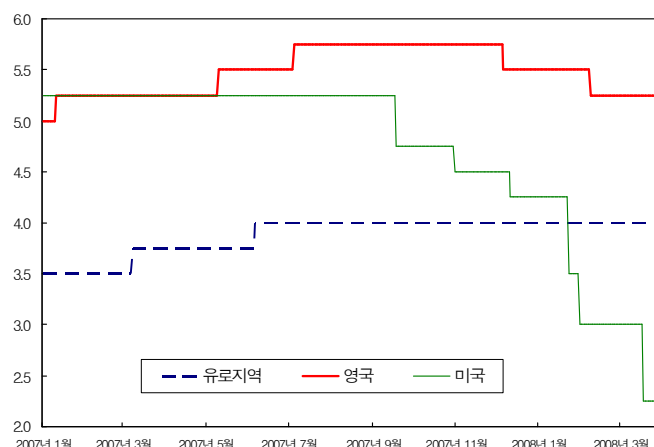
○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매매차익을 기대한 주택모기지 대출도 크게 증가하였던 영국의 경우, 금리가 상승하자 가계부채도 급증하였음. 영국의 가계부채는 2006년 말 1조 3,000억 파운드인 지난 10년 동안 3배로 증가하였고,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997년 105%에서 2006년 160%로 확대된 상태임.

다. 유럽중앙은행 및 영란은행의 금리정책

■ 유럽중앙은행(ECB)은 2003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2.0%로 유지했던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4.0%까지 인상하였음.

- 고유가와 원자재 및 농산물의 가격상승이 계속되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임.
- 그러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여파에 따른 신용시장 혼란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2007년 6월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4.0%로 동결하고 있음.
- 한편 영란은행은 이미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여, 2007년 7월 이후 5.75%로 유지해 오던 기준금리를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 각각 0.25포인트 인하하여 2008년 3월 현재 5.25%를 유지하고 있음.

그림 2. 주요국의 기준금리 추이



자료: Global Insight.

■ EU와 미국의 금리차이가 확대되면서 유로화 강세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.

-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07년 6월 이후 2008년에도 4%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, 2007년 9월 5.25%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2008년 3월 현재 2.25%까지 하락하면서 양자간 금리차이가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.
- 이러한 금리차이는 유로화 강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, 2007년 상반기 1유로당 1.3 달러대에서 움직였던 유로화는 2007년 9월에 1.4달러를 넘어섰으며 2008년 2월에는 1.5달러를 넘어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임.

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신중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.

- EU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유로화 강세 현상으로 EU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. 하지만 EU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²⁾ 유로화 강세는 이러한 물가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시켜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.
-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은 2008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 한 차례의 금리 인가가 예상됨.

라. 회원국의 재정적자

■ 유로지역의 경기회복과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주요 회원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EU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- 독일,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, 포르투갈, 그리스 등은 2003년 이래 재정적자가 GDP의 3%를 초과하여 EU 안정·성장협약(SGP)³⁾의 재정준칙을 위반해 왔음.
- 2006년에 와서 프랑스와 독일의 재정상황은 뚜렷이 개선되었는데, 독일의 경우 경기상승 지속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2005년 GDP의 3.4%였던 재정적자가 2006년에는 1.6%로

떨어졌으며, 프랑스도 재정적자도 2005년 GDP의 2.9%에서 2006년에는 2.5%로 낮아졌음.

- 한편 이탈리아, 그리스, 포르투갈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우려할만함.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2005년에는 GDP의 4.2%였으나 2006년에는 오히려 4.4%로 상승하였으며,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GDP의 6.1%에서 3.9%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안정·성장협약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.

표 4. 주요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규모

(단위: % of GDP)

국 가	2003	2004	2005	2006	2007*
독 일	-4.0	-3.8	-3.4	-1.6	0.1
그 리 스	-5.6	-7.3	-5.1	-2.5	-2.9
프 랑 스	-4.1	-3.6	-2.9	-2.5	-2.6
이탈리아	-3.5	-3.5	-4.2	-4.4	-2.3
포르투갈	-2.9	-3.4	-6.1	-3.9	-3.0

주: *2007년은 EU 집행위원회의 추정치임.

자료: European Commission(2007. 8), Economic Forecast.

표 5. 주요 EU 회원국들의 정부부채 규모

(단위: % of GDP)

국 가	2003	2004	2005	2006	2007*
독 일	63.8	65.6	67.8	67.5	64.7
그 리 스	97.9	98.6	98.0	95.3	93.7
프 랑 스	62.9	64.9	66.7	64.2	64.3
이탈리아	104.3	103.8	106.2	106.8	104.3
포르투갈	56.9	58.3	63.7	64.8	64.4

주: * 2007년은 EU 집행위원회의 추정치임.

자료: European Commission(2007. 8), Economic Forecast.

■ 2007년에는 다수 회원국들이 EU의 안정·성장협약의 재정준칙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누적된 정부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- 특히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들의 정부부채 규모는 GDP의 60%를 초과하고 있음.

마.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

■ 독일, 프랑스, 스웨덴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금,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복지혜택 축소가 핵심내용이며 이에 따른 미래의 불안감은 가계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2) 그 동안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%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EU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유가 및 곡물·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2007년 11월에 3.1%로 상승하였고 2008년 2월에도 3.4%를 기록 중임.

3) 안정·성장협약(SGP: Stability and Growth Pact)은 회원국들의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준칙(fiscal rule)으로, 경제통화동맹(EMU) 참가국으로 하여금 매년 재정수립조건(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% 이내로 유지하고,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% 이하가 되어야 함)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.

- 메르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, 연금 및 보험제도 개혁,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 중임.
- 노조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수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정책이 추진됨.
-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007년 2월 2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, 3월 9일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 높이는 연금개혁법안도 하원을 통과하였음.
- 또한 독일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39%의 현 법인세 수준을 2008년까지 30%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 개정안도 2007년 3월 14일 의회에서 통과됨.
- 지난 2006년 4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도입이 좌절된 바 있는 프랑스는 2007년 5월 6일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(UMP)의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, 신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는 수요증시 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·사회복지·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공급증시 정책을 추진 중임.
- 프랑스 신정부는 2007년 5월부터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, 근로고용유인을 위한 주 35시간 법정노동시간제 폐지,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, 공무원 인원 축소를 통한 인건비 절감, 공기업 연금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.
- 한편 스웨덴에서는 사민당계 정당을 누르고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달성, 2006년 10월 출범한 라인펠트(Fredrik Reinfeldt) 총리의 우파 연합정권이 세금감면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 감소, 실업 및 병가수당 자격조건의 엄격화 등을 통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여 고용과 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임.
- 2007년 1월 중간소득층에 대한 특별세금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부유세⁴⁾를 폐지하였으며, 고용주가 병가 중인 근로자들의 질병수당 비용의 15%를 부담해 오던 제도도 폐지함.
- 실업수당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자격조건도 엄격하게 하였으며, 질병으로 인한 병가수당도 최대 지급액을 종전의 75% 수준으로 축소하고 수급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함.
- 의료보험 보상액 상한선을 월 3만 3,000크로나에서 2만 4,800크로나로 인하하며 의료비 및 의약품 자가 부담액을 인상함.
- 한편 이러한 주요국들의 경제개혁은 사회보장 축소뿐만 아니라 친기업적 정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음.
- 독일의 경우, 슈뢰더 전임 총리의 Agenda 2010, 그리고 메르켈 현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독일 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.

3. 2008년 EU의 경제전망

- 2008년 EU 경제성장률은 서브프라임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, 유로화 강세, 고유가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2007년(2.9%)보다 낮은 1.8~2.0%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음.
- 고용의 꾸준한 확대에 따른 실업률 하락으로 민간소비 지출이 확대될 수 있겠으나, 물가상승, 주택경기 하락, 주요국들의 복지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혁정책의 추진 등은 민간소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2008년 가계소비 지출 증가율은 2007년의 2.2%보다 낮은 1.9% 내외로 전망됨.
- 총투자 증가율도 신용경색에 따른 차입금리 증가, 세계경기 하락으로 인한 수출둔화 등으로 2007년의 5.7%보다 낮은 3.0%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, 정부지출 증가율도 2007년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.
- 수출증가율은 세계경기의 둔화 및 유로화 강세 지속으로 2007년의 5.2%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4.7%로 예상됨.
- 그러나 세계경기의 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, 러시아 등의 신흥시장 및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EU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4) 가족 모두의 총 재산이 독신의 경우 150만 크로나(약 20만 달러), 결혼한 부부의 경우 300만 크로나(약 40만 달러) 이상일 경우 초과 재산에 대해 1.5%를 부유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.

표 6. EU27의 실질 GDP 증가율 전망

(단위: %)

구 분	2007	2008	2009
가계소비	2.2	1.9	1.9
정부소비	1.8	1.8	1.8
총 투 자	5.7	3.2	3.1
수 출	5.2	4.7	5.1
수 입	5.0	5.1	5.1
GDP	2.9	2.0	2.2

자료: EIU(2008. 3), Country Report: European Union.

■ EU 주요 회원국들의 2008년 경제성장률도 2007년보다 낮아지며, 특히 그동안 고성장을 보여 왔던 영국과 스페인의 성장률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.

-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경기 부진의 영향이 큰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, 영국은 2007년 3.0%에서 2008년에는 1.7~1.8%로, 스페인은 같은 기간 3.8%에서 1.8~2.7%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.

- 독일의 경제성장률도 2007년 2.5%에서 2008년에는 1.4~1.9%로 하락하고, 이탈리아의 경우 같은 기간 1.5%에서 0.3~0.7%로 하락하여 큰 폭의 경기둔화가 예상됨.

- 그러나 단기적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는 수요증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는 2007년 1.9%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8년에는 1.4~1.7%로 성장하여 성장률 하락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. **KIEP**

표 7. 예측기관별 주요 EU 회원국 경제성장률 전망

(단위: %)

국 가	2007년	2008년		
		EU 집행위	EIU	Global Insight
EU27	2.9	2.0	2.0	1.8
독 일	2.5	1.6	1.9	1.4
프 랑 스	1.9	1.7	1.6	1.4
이탈리아	1.5	0.7	0.7	0.3
스 페 인	3.8	2.7	1.9	1.8
영 국	3.0	1.7	1.7	1.8

자료: European Commission(2008. 2), Interim Forecast; EIU(2008. 3), Country Report; Global Insight(2008. 3), Online Analysis.